이명박 대통령이 9일 밤 KBS에서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질문있습니다!'에 출연해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회생 약속, 하루도 잊은 적 없다"

美 쇠고기 시장 구조에 맡겨야
전기·가스료 20%까지 인상 안해
지금쯤 행정구역 개편 있어야
무주택자에 복지 측면서 주택 공급

■'대통령과의 대화' 일문일답

이명박 대통령은 9일 밤 '대통령과의 대화-질문 있습니다'에서 특정 이슈를 부각시키기 보다는 진정성과 진솔한 면모를 보여주는데 주력했다.

다음은 대통령과 일문 일답.

-높은 지지율로 시작한 국정운영은 임기 초 리더십을 발휘 못해 대운하나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지지율이 10%대까지 하락했는데 그 이유는.

▲지난 6개월은 제 자신, 우리 정부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게 만들었다. 국제경제 환경도 전례가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정부가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서두른 감이 있고, 국민 심정 이해하는데 소홀했다는 감이 있고, 기대가 큰 만큼 경제를 살리라고 한 만큼 실망감이 있었을 것이다.

-김윤미(회사원) : 사실상 국민에게 다가오는 경제 살리기는 없었다. 경제가 어려워 제2의 IMF가 온다는 말이 떠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IMF 위기 같은 것을 맞이해서 경제파탄이 나는 일은 절대 없다. 상황 자체가 그때와 완전 다르다. 저도 위기라는 말을 쓰는 데 전 세계가 어렵고 모두 어려울 때 경제 주체와 공직자에 위기감, 긴장감을 주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추석 이후 전기비와 가스비를 인상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실 전기나 가스는 원료를 100% 수입하기 때문에 전기, 가스비가 오르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전기, 가스는 서민경제에 부담을 안 주려고 값을 올리지 않았다. 기름이 15~20% 올랐지만 억제하고 있었다. 추석이 지나면 조정을 조금 하겠지만 지금 말한 대로 15~20% 그대로 올릴 생각은 없다.

-지금 상황은 분양가가 너무 비싸 집을 사기 힘들다. 분양가를 낮출 방법이 없나.

▲그간 한국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을 인정한다. 더 떨어져야 한다. 서민의 집이나 서민이 아니라도 집을 처음 갖겠다는 분을 위해 국민주택 정도는 짓고,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땅값이 내리고 건축비가 내려서, 아마 정부가 그렇게 분양하면 지금주택 거래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정부의 큰 숙제는 청년 실업 해소인데 지금은 노동력이 필요한 직업에 노동자가 없는 현실이다.

▲정부는 마이스터 고교를 만들어 졸업하면 기업에 연결해 기업에 들어가고, 기업에서 일하다가 2년제, 4년제 들어가는 평생학습을 생각하고 있다. 마이스터 고교를 졸업해 4년 직장을 다니면 4년 대학을 다닌 것보다 대우 받는 제도를 만들자. 특히 독일 같은 마이스터 고교를 나오면 누구나 데려가는 우수한 정책을 만들겠다.

-(엄길청 경기대 교수) :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관련, 지역간 사정이 다르고 지방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분권화 요구도 높고 다양한 형태의 자유를 달라는 단체장 모습도 강해지고 있다. 당초 5+2 광역경제권 공약과 관련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기본적으로 현재 기초단위 행정구역은 100년 전 갑오경장 때 개혁해서 만든 것이다. 당시는 농경시대 아니냐. 21세기 완전히 디지털 시대에 와서 옛날 같이 냇가나 강을 따라 만든 단위로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경제권, 생활권, 행정서비스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쯤은 행정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국회의 안을 갖고 그대로 좋다는 뜻은 아니고.. 그러나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해결할 수 없다. 내 지역구, 선거 관할이 어디 갔느냐고 물어보면 여야간 충돌이 생긴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실패할 것이고,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게 100년만에 개편한다면 전문가가 참여해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녹색 성장을 위해서는 걸맞은 경제, 산업, 환경 정책이 크게 바뀌어야 하는데 과연 정부가 거기까지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녹색 성장이라는 용어가 생소한 것 같지만 외국,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기업들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녹색 성장 시대를 열어도 되고 안 열어도 되는 그런 단순한 환경적인 측면을 벗어난다.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고 기후 변화라는 대전제가 있다. 기후 변화의 전제는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뜻이고, 그것은 모든 국가가 내가 탄소를 얼마나 줄이겠다는 목표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강제이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 상품이 해외에 나갈 수가 없다. 현대차나 기아차나 GM대우 같은 데가 자동차를 만드는 데 현대가 엔진을 만들면서, 탄소를 배출하면서 앞으로 10년, 20년 수출을 못한다. /연합뉴스

■모두 발언

반갑다. 온가족이 함께 모여 오손도손 밀린 얘기를 나누며 가족들의 소중함을 느낄 추석이 며칠 안남았다. 이번에는 추석 연휴가 매우 짧고 경기도 안좋아 고향에 못가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어느 곳에 계시든간에 이번 추석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란다.

시장에는 장사가 안된다는 하소연이 많다. 일자리를 못구한 젊은이, 명절이면 더 부담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저 역시 가슴 아프다. 경제 살리라고 대통령으로 뽑아줬는데 형편이 언제 나아질 지 모르겠다는 한숨 소리를 듣는다. 국민 여러분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안다.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우리 희망을 잃지 말자. 늘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온 역사가 있다. 오늘밤 국민 여러분과 진솔한 얘기를 나누고 싶다.

與 "진정성 확인 소통의 자리"
野 "민심과 동떨어진 인식"

■정치권 반응

여야는 9일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9일 이명박 대통령이 TV 생중계로 진행된 '대통령과의 대화'에 출연해 각종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진정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는 아플만큼 솔직한 질문이 제기됐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대통령의 깊은 진정성을 확인한 소통의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운영에서 국민의 목소리와 눈높이를 존중하겠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진정한 소통의 기회가 됐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또한 "무엇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통령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나아가 우리가 노력해 어려운 경제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이 대통령이 많은 잘못을 하고 있다고 잇따라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 대통령은 단 한번도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대화가 아니라 국민과 타협하지 않고 현재의 강경기조를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의 안이하고 민심과 동떨어진 인식이 걱정된다"면서 "경제분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다른 분야를 스쳐 지나간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李 '허심탄회·진지' 盧 '상대 설득 토론형'

■전·현 대통령 비교

이명박 대통령이 9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보여준 화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것과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때로는 감성적으로, 때로는 허심탄회하게 심정을 얘기하며 진지하게 대화를 진행했다.

반면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세 차례의 대화에서 특유의 말솜씨를 발휘하며 상대를 설득하는 토론가의 면모를 선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종일관 미소를 지은 채 여유를 잃지 않으면서도 "한숨짓는 소리를 듣고 있으며 국민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 "가슴이 아프다", "비정규직의 애환을 잘 안다"며 서민들이 겪는 민생고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 쇠고기 사태 이후 불거진 '국민과의 소통 부족'이라는 지적을 감안한 듯 "국민과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국정지지도, 경제위기설, 부동산대책, 비정규직 대책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반해 노 전 대통령의 경우 대연정 제안, 언론정책, 부동산 대책, 한미동맹 등 국정현안에 대해 소신에 따라 거침없이 답변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5월 첫번째 대화에서 언론정책을 놓고 "일부 언론이 지금처럼 비판한 적 있나. 얼마나 저를 괴롭혔느냐"며 패널들과 불꽃튀는 공방을 벌였다. 2005년 8월 두번째 대화에선 대연정 제안과 관련, "한나라당은 극복 대상이 아니라 대화 상대"라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연합뉴스